

손실보전금 ‘100억원 미만’ 구두 합의

제주~청다오 물류 활성화 실무협의체 첫 회의
中, 우리 측 요구 수용 대신 새로운 조건 내걸어
도 “올해 내 새협정 동의안 도의회 제출 목표”

제주~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2년간 100억원 미만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제주도와 선사 측이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 협정 체결에 대비한 지방투자심사 준비 작업도 본격화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소상공인물류과(이하 물류과)와 국제물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제주~청다오 물류 활성화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제주~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업무는 추진단이 맡았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 물류과로 넘어간 상태다. 추진단은 제주~청다오 항로 새 협정 체결 협상을 도맡고 있다.

첫 회의에는 두 부서뿐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청다오 항로를 이용하

는 화주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주~청다오 항로 물동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등 수요 예측에 대한 논의도 오갔지만, 당장 이 자리에서 전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 예측은 앞으로 받게될 청다오 항로 지방투자심사(지투심사) 기준과 관련이 있다.

제주도는 청다오 항로 선사와 새로운 조건으로 협정을 맺기 위해 현재 협상 중이다. 지난해 1월 체결된 기존 협정은 중국 선사가 제주~청다오 항로에서 화물선을 한 해 52차례씩, 3년간 운항하는 조건 아래 선사 측이 화물이 부족해 손실을 보면 그 비용을 제주도가 모두 보전하는 것이다. 연간 운항 비용이 519만4000달러, 우리나라 돈 약

70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도가 이 기간 최대 보전해야하는 비용은 220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 비용을 연간 50억원 미만, 내년부터 2년간 100억원 이내로 낮추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선사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정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사)를 받지 않고 협정을 체결한 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운항 횟수는 유지하되 손실보전금을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중국 선사 측이 손실보전금 축소 요구를 구두상으로 동의했다”면서 “단 선사 측이 운항 손실 일부를 자신들도 감수하는 대신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을 100억원 미만으로 낮춰 정부 심사를 피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검증 절차까지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 위원회가 지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투심사를, 100억원 미만이라도 40억원을 초과하면 지방정부가 꾸린 민간 위원회가 검증하는 지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투심사에서는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 필요성과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수요 예측치를 제시해야 비용 대비 편의 분석을 통한 경제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수요 예측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도 이 때문이다. 도에 대한 지투심사는 조례에 따라 민간 재정 전문가 등 15명으로 꾸려진 지방재정계획심의회위원회가 맡는다.

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새 협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단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사전에 지투심사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심사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수요 예측치가 있어야 비용 대비 편의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 도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구좌읍 중산간에 ‘지역책임택시’ 뜬다
도,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10대 시범 운영
구좌 관내 운행… 승객이 전화 호출 시 도착

버스 운행이 뜬한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지역에서 주민이 전화로 부르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책임택시’가 10월부터 운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구좌읍에서 지역책임택시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책임택시는 민선 9기 공약인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망 확충’을 위한 첫 사업이다.

구좌읍 중산간 지역에는 타운하우스 등 신규 주거지가 늘면서 주민이 증가했지만 지리적 여건 상 대중교통이 달기 어렵고, 오가는 택시도 뜸해 승객이 호출 뒤 탑승하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반면 지역책임택시는 다른 택시와 달리 기본적으로 구좌읍 관내에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승객이 호출하면 이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지역책임택시는 주민이 전화로 호출하면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와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통합콜센터 대표번호(064-742-8282)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시범 운영 기간 지역책임택시 10대를 배치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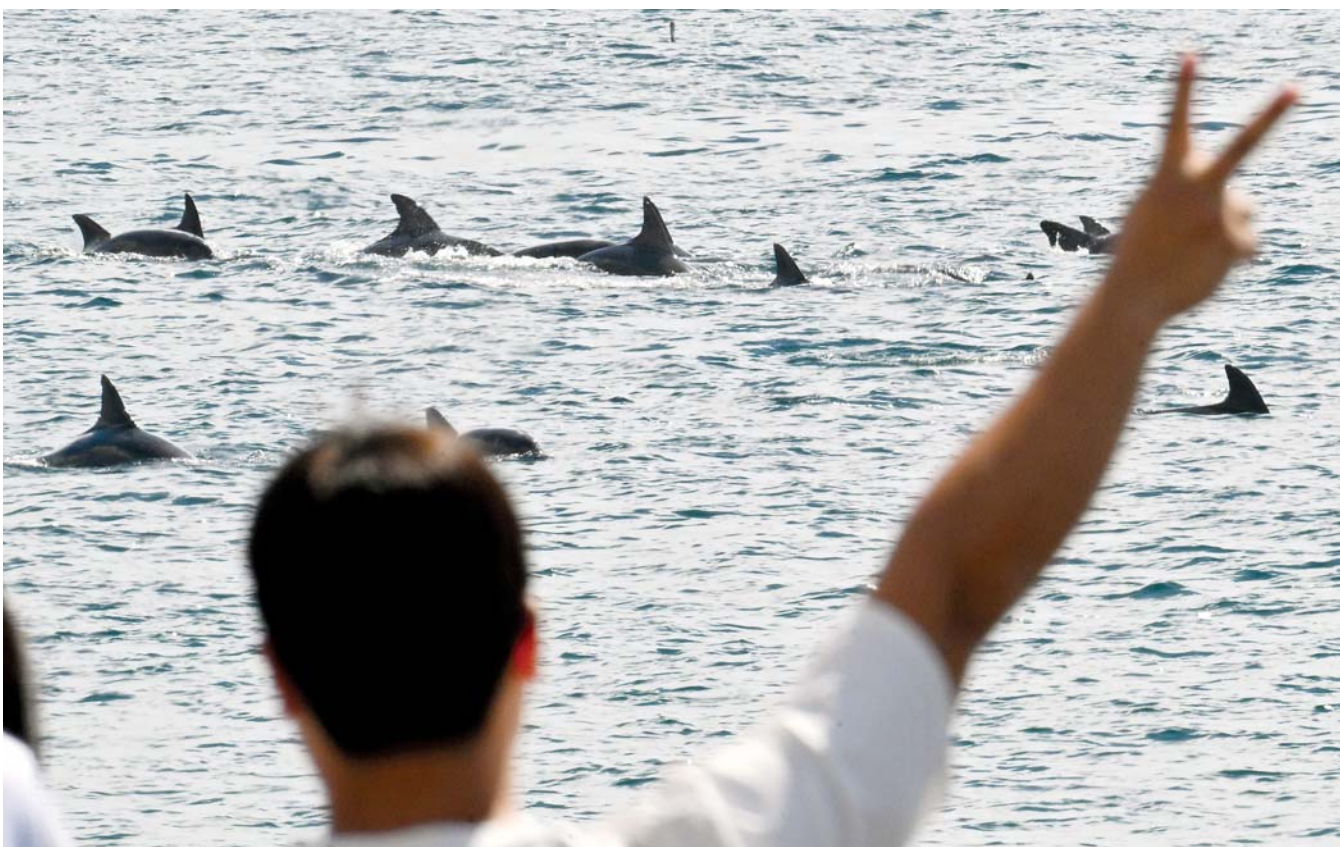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3대,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대를 각각 배치해 간선버스 정류장과 병·의원, 학교 등 주요 생활거점을 오가는 주민의 이동을 돕는다.

오후 6시 이후에는 구좌읍 안에서 목적지 제한 없이 운행해 저녁 시간대 주민 이동과 지역 상권 이용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시범운영 기간 주민의 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읍·면 지역책임택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가 자주 닿지 않는 중산간 마을 주민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반가운 남방큰돌고래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에서 관광객들이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들을 바라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88.6% 마무리

제주실무위 1만2915명 중 1만1445명 심사 완료

현재 총 7641억 지급

제주4·3 보상금 신청 희생자의 88.6%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24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5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3건을 심사했다.

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2915명 가운데 1만1445명(88.6%)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제주4·3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마친 희생자는 1만789명이며, 현재까지 9883명의 청구권자 10만3623명에게 총 764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분야에서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4건,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1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확인(인지)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을 심사했다.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567건 가운데 146건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심사율은 25.7%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를 처음 인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처음 결정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8@ihalla.com

2차 공공기관 제주이전촉구 범도민 서명운동 연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발맞춰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서명운동의 기한을 10월

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 8월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도내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

개해 왔다. 또 농업인단체협의회도 농협 하나로마트 등 도내 주요 장소에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공공기관 제주 유치에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왔다.

이태윤기자

민주당 “마사회 등 제주 이전 공감”… 2면 / 공항 위협 미승인 드론 100건 이상… 4면

제주 전역 난방비 혁명! (축열식 히트펌프 - 주택용 보급사업)

모집 대상



- 제주도 내 가스/등유 보일러 사용 단독가구
- 3k 태양광 설치 가구 우선 순위

사업 내용 및 파격 지원



- 주택 내 축열 히트펌프 설비 보급

가구당 최대 1,400만원 보급 금액

70% 보조금
(최대 980만원)

30% 자부담
(자기부담 30%)

(가구당 부담은 30%)

선정 절차 및 문안



- 신청 가구 방문 : 설치 공간, 태양광 설치, 단열 상태 검토 후 선정

“에너지 절약과 환경을~”

대성히트에너지(주)

공 장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55-72

제주지사 및 A/S센터 :

제주시 첨단로 8길 40

제주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2층 209호

TEL : 064-723-8577

FAX : 064-721-8577

**주택용 대성 히트펌프 (지열)
전국 보급률 1위 기업**

공기열 히트펌프 보일러 생산 전문 회사

**상담/신청 문의
010-7279-3751**

* 히트펌프 시공 및 A/S는 대성히트에너지 본사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합니다.